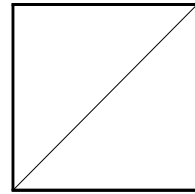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의안번호	제 356 호
의 결 연 월 일	2020. 10. 21. (제 18 차)

의  
결  
사  
항

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에 대한  
부문검사 결과 조치안

금융위원회회의 안건

제 출 자	위원장 은 성 수
제출 연월일	2020. 10. 21.

## 1. 의결주문

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<별지>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'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', '업무상 횡령', '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', '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'이 적발되어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'자본시장법')」 제 422조 제1항에 따라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 및 직무정지 3월 상당) 통보 및 직무정지 3월 조치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(이하 금산법)」 제28조 제1항 제 15호에 따라 과태료, 자본시장법 제449조 제1항 제15호 및 제3항 제19호에 따라 과태료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(이하 지배구조법)」 제43조 제2항 제1호의 2, 제1호의 3, 제3항에 따라 과태료, 자본시장법 제 449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

## 3. 검사결과 지적사항

### 가.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

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 : 과태료(32백만원) 부과

### 나. 업무상 횡령

- 前 대표이사 ●●●●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
- 前 대표이사 ☎☎☎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
- 前 감사 ■■■■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

### 나.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

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 : 과태료(79.2백만원) 부과
- 前 대표이사 ▼▼▼ : 과태료(3.2백만원) 부과
- 前 대표이사 ●●●● : 과태료(1.6백만원) 부과
- 前 대표이사 ☎☎☎ : 과태료(1.6백만원) 부과

다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
- 前 감사 ○○○○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 
과태료(2.5백만원) 부과

4. 참고사항

가.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

나. 관계법규 : <붙임 1>

다. 제재내용 공개안 : <붙임 2>

라. 관계부서 협의

- 제16차 제재심의위원회(2020.7.22.) 심의필
-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(2020.8.19.) 심의필

<별지>

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- 다 음 -

## 1. 조치내용

### □ 기관에 대한 조치

○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 : 과태료(32백만원) 부과

- 조치사유

·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

- 법적근거 : 「금산법」 제24조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) 제1항, 「금산법 시행령」 제24조의2(시정조치 등) 제1항 제3호, 「금산법」 제28조(과태료) 제1항 제15호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<별표 3>

○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 : 과태료(79.2백만원) 부과

- 조치사유

·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 제3항, 「자본시장법」 제418조(보고사항), 「지배구조법」 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제2항 및 제3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2항 제2호 다목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71조(보고사항 등), 「지배구조법」 제43조(과태료) 제2항 제1호의 2, 제1호의 3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<별표 3>

## □ 임·직원에 대한 조치

- 前 대표이사 ●●●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
- 前 대표이사 ☎☎☎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
- 前 감사 ■■■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

### - 조치사유

#### · 업무상 횡령

- 법적근거 :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제1항, 「형법」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, 「특경법」 제3조(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), 「자본시장법」 제422조 제1항

- 前 대표이사 ▼▼▼ : 과태료(3.2백만원) 부과
- 前 대표이사 ●●● : 과태료(1.6백만원) 부과
- 前 대표이사 ☎☎☎ : 과태료(1.6백만원) 부과

### - 조치사유

#### ·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지배구조법」 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여부 보고 등) 제2항 및 제3항, 「지배구조법」 제43조(과태료) 제3항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<별표 3>

- 前 감사 ○○○ :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 
과태료(2.5백만원) 부과

### - 조치사유

#### ·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
- 법적근거 :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1항 3호 및 4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4항 제1호, 「자본시장법」 제449조(과태료) 제2항, 「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」 제20조(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) 제1항 및 <별표 3>

## 관계법규

### □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
**제24조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)** ① 금융기관(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(이하 "동일계열 금융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·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

**제24조의2(시정조치 등)** ① 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제24조제1항·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3.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한 주의·경고 또는 문책의 요구

**제28조(과태료)**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5.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

#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**제33조(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)** ③ 금융투자업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 등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으로서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
**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** ①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(겸영금융투자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.

3. 매매명세를 분기별(투자권유자문인력, 제286조제1항제3호나목의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할 것

**제418조(보고사항)** 금융투자업자(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한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4. 최대주주가 변경된 때

11. 본점의 위치를 변경한 때

13.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**제420조 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7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
2. 신탁계약, 그 밖의 계약의 인계명령
3.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
4.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
5. 기관경고
6. 기관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**제422조 (임직원에 대한 조치)**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 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
**제449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5. 제33조제3항(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자

② 제63조제1항(제289조, 제304조, 제328조, 제367조,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

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9. 제418조(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

## 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** ② 법 제33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”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집합투자업의 경우

다.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
**제371조(보고사항 등)**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4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금융위원회는 그 사실의 중요도에 따라 보고기한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.

③ 법 제418조제1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1.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

3. 해당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의 당사자로 된 경우

**제373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** ②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 등”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.

2. 「형법」

3. 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

**제39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.

### [별표 2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시행령 제390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.



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다. 법 제33조제3항(법 제350조, 제357조제2항 또는 제3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시한 경우	법 제449조 제1항제15호	3,000
러. 법 제418조(법 제335조의14 및 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449조 제3항제19호	1,800
저. 법 제63조제1항(법 제289조, 제304조, 제328조, 제367조, 제383조제3항 또는 제44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	법 제449조 제2항	250

### □ 금융투자업규정

**제2-16조(금융투자업자의 보고사항)** ① 영 제37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
  - 가. 법 제418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(제10호를 제외한다)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  - 나. 영 제371조제3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

**제3-70조(경영공시)** ① 영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7. 법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이 아닌 금융투자업자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
  - 나.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
  - 마.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
  - 사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

### □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

**제5조(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)** 규정 제2-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공시항목은 별지 제2호와 같다.

<별지 제2호>

6. 금융투자업자 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항

수시공시 항목	공시양식	비고
사.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·신청되거나 그 소송 등이 확정·판결된 사실을 확인한 때	6-8~6-9	
아. 최대주주,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가 변경된 때	6-10-1~6-10-3	

<별표3>

과태료 부과기준

2. 과태료 산정방식

가.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(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.

나.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,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. 다만,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※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·장소적 근접성, 행위의사의 단일성,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.

다.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. 이하 같다.)을 산정한다.

라. 위반자에게 가중·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·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.

마.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·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.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바.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3. 예정금액의 산정

가.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.

위반결과 \ 동기	상	중	하
중 대	법정최고금액의 100%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
보 통	법정최고금액의 80%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
경 미	법정최고금액의 60%	법정최고금액의 40%	법정최고금액의 20%

※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중 대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(「방송법」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·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·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

(2) 보 통 : ‘중대’, ‘경미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

(3) 경 미 :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·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

※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(1) 상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

(2) 중 :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, 동기,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

(3) 하 :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
나.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(이하 “예정비율”이라 한다)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(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.

다.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‘중대’로 본다.

#### 4.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.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, 나목(5), (6) 및 (9)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.

##### 가. 가중 사유

(1) 삭 제

(2)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범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(3) 삭 제

(4) 삭 제

##### 나. 감경 사유

- (1)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2)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3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4)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5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(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)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6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7)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(법인은 제외한다), 현실적인 부담능력,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- (8) 삭제
- (9)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, 직무정보 이용,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'중대'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## 5. 과태료 부과 면제

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.

- (1)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 실효성이 없는 경우
- (2)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·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·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,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
- (3)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
- (4) 공무원(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)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,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8조(위법성의 착오)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(5)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,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임직원
- (6)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)이 10만원 미만인 경우
- (7)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·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.
- (8)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6. 기 타

최종 과태료 부과금액(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)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.

<별표6>

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

3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」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예정 비율은 <별표3>에 따른다)

가.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제1항 및 제449조제2항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, 준용규정 포함)

- (1) 위반건수 : 월별(투자권유자문인력, 조사분석인력 및 투자운용인력)·분기별(일반 임직원) 매매명세 미통지의 수
- (2) 위반결과의 판단 : 위반주체, 위반기간, 위반금액 및 불건전 거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건별 판단

중대	보통	경미
월별* 매매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) 임원(사실상 임원 포함) 2) 월별* 매매일수 10일 이상 3) 불건전 거래(선행매매, 차명계좌 등) 4) 월별* 매매금액 2억원 이상	중대 경미 이외	월별* 매매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

\* 일반 임직원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며, 월별 매매금액 및 매매일수는 분기별로 환산하여 적용

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

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②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금융회사는 임원을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1조(대주주 변경승인 등) ① 금융회사(「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, 「금융지주회사법」에 따른 은행지주회사,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호저축은행,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,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시설대여업자, 할부금융업자,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외한다)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·양수(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, 이하 이 장에서 "취득등"이라 한다)하여 대주주(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 「조세법 처벌법」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- ③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, 사용인,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(科)한다. 다만,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43조(과태료)**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1의2.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
- 1의3.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자
- ③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·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 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

**제34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**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### [별표 2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34조 관련)

#### 1. 일반기준

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. 다만,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.

#### 2. 개별기준

(단위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나.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2	1,800
다. 법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)에 관한 공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 또는 보고를 한 경우	법 제43조 제2항제1호의3	1,800
누.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따른 서류의 비치·제출·보고·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한 경우	법 제43조 제3항	400

## □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

**제3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** ① 금융회사는 법 제7조제2항·제3항에 따라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(사임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선임 또는 해임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융회사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관련 협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.

1. 임원을 선임한 경우 : 임원이 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과 임원의 임기·담당하는 업무·직위에 대한 사항을 포함할 것
2. 임원을 해임한 경우 : 해임 사유 및 향후 임원 선임일정을 포함할 것
3. 일반인이 알기 쉬운 표현을 사용할 것
4. 해당 금융회사가 공고한 것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할 것

## 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

2. 제재조치일 : 2020. 11. 5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○ 기관경고 ○ 과태료 111.2백만원 부과
임원(6명)	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부과(과태료 25백만원) 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 부과(과태료 1.6백만원) 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해임요구 상당) 부과 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직무정지 3월 상당) 부과(과태료 1.6백만원) 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주의 상당) 부과 2명
직원(1명)	○ 퇴직자 위법·부당사항(정직 3월 상당) 부과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초과 취득 시 승인절차 미이행

- ☐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,
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는 20××.×.××. □□□□□□□□□(주)(비상장)의 지분 ××.×%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하였고, 20××.×.××. ○○○○○○○○○(비상장)의 지분 ×××%를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실이 있음



< 관련규정>

1. 「금산법」 제24조(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) 제1항, 「금산법」 제24조의2(시정조치 등) 제1항, 「금산법」 제28조(과태료) 제1항 제15호

나. 업무상 횡령

□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
①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의 대표이사 ●●●은 20××.××.××.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◎◎은행 ◇◇◇◇◇지점 동사 명의계좌에 보관 중이던 ×천만원을 ◆◆은행 본인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있음

② (i) 동사의 감사 ■■■은 20××.××.××. 적법한 권한없이 자금담당자로부터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교부받아 동사 명의계좌(△△△△△△ ▲▲▲지점)를 개설하였고,

20××.×.×.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(△△△△△△ ▲▲▲지점)에 보관 중이던 ×.×억원을 인출하여 같은 지점 ☆☆☆ 명의계좌로 무단 입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고,

(ii) 20××.×.××.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동사 명의계좌(◎◎은행 ◇◇◇◇◇지점)에서 ×.××억원을 ★★★★★투자자문(주) 명의계좌로 무단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이 있음

③ 동사의 경영관리부 직원 ∇∇∇은 20××.××.××. ■■■이 △△△△△△ ▲▲▲지점에 동사 명의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계좌개설에 필요한 법인인감도장 및 관련서류 등을 ■■■에게 교부하였고,

같은 날 동 계좌가 개설되자 동 계좌로 회사자금 x.x억원을 적법한 절차없이 이체하여, 20xx.x.x. ■■■이 동 계좌에서 x.x억원을 무단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④ 동사 대표이사 ■■■(xx.x.x.~'xx.x.xx.)은 업무총괄자로서 'xx.x.xx. ■■■의 x.xx억원에 대한 횡령행위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음

< 관련규정 >

1.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제1항, 「형법」 제356조 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, 「특경법」 제3조(특정재산 범죄의 가중처벌)

다. 주요 경영상황 보고 및 공시의무 등의 위반

1) 경영상황 보고 · 공시의무 위반

- ☐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경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는데도,
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은 20xx.xx.xx. 최대주주 변경사실, 20xx.x.xx. 소송 당사자가 된 사실이 있었음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2) 금융투자업자의 보고의무 위반

- ☐ 금융투자업자는 본점 이전, 자본금 증가가 되는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은 20xx.xx.xx. 자본금 증가, 20xx.xx.xx. 본점 이전 사실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

### 3) 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의무 위반

-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데도,
  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은 20××.×.××. ~ 20××.×.×. 기간 중 발생한 임원 선임·해임 사실을 7 영업일 이내에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,
  - ♡♡♡, ☼☼☼, @@@은 동사의 임원으로서 공시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음

#### < 관련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33조(업무보고서) 제3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6조(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) 제2항 제2호 다목
2. 「자본시장법」 제418조(보고사항) 제4호, 제11호 및 제13호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371조(보고사항 등) 제1항 및 제3항 제1호 및 제3호
3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임원의 자격요건 적합 여부 보고 등) 제2항

### 라.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

-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, 소속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매매명세를 신고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데도,
  - 모놀리스자산운용(주)의 감사 ●●●은 20××.×.××.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면서, 소속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

#### < 관련규정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63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1항,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64조(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) 제4항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	금융위원회	금융감독원
소관부서	자산운용과	자산운용검사국
연락처	02-2100-2663	02-3145-7699